지역과 함께하는 '전남형 방과후학교' 내실화한다

전남교육청, 센터 중심·지역 위탁 운영 및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주력'

전라남도교육청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전남형 방과후학교' 모델의 운영 내실화에 주력하고 있다. 학교가 감당하던 행정·운영 부담을 교육지원청과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고, 학생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장 눈에 띄는 사례는 곡성·구례 교육지원청의 '센터중심 방과후학교' 모델이다. 두 교육지원청은 전국 최초로 방과후학교 행정 전반을 교육지원청에서 일괄 지원하는 구조를 도입해, 학교는 본연의 교육활동에 집중하고 프로그램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지역의 문화·인적 인프라를 적극 활용한 점도 눈에 띈다. 곡성은 농악전수관, 향교유림회관 등과 협력해 '학교 밖'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고, 곡성군미래교육재단과 함께하는 '곡성군립청소년관현악단', '꿈놀자초등관현악단'을 결성해 학생들은 물론 지역사회에 큰 호응을 받고 있다. 구례는 학교 밖 방학 중 프로그램으로, 마을관리협동조합과 함께 다양한 K-food 체험을 운영해 학생 참여도를 높였다.

이와 함께, 완도교육지원청은 지역 업체에 프로그램 운영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강사 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다양한 선택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아울러 교육지원청 중심의 방과후 교구 대여 사업을 시행 중이며, 권역별 찾아가는 방과후 체험행사를 운영하고 등 현장 중심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이러한 지역 중심 운영 모델을 확대하기 위해 21일 목포에서 '방과후전담실무사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하며,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연수에서는 센터중심 방과후학교, 지역 위탁 운영, 학생 수요 기반 프로그램 재구성 등 내실화 전략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뒀다.

지난 21일 목포에서 '방과후전담실무사 역량 강화 연수'가 진행되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앞으로 교육지원청-학교-지역사회 간 협력 모델을 확산해 방과후학교 운영의 품질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2026년부터는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해 학생 중심 운영을 강화하고, 지역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종만 학령인구정책과장은 "전남의 방과후학교는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하나로 묶어 학생들에게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교육 과정"이라며, "현장의 어려움을 줄이고 운영 품질을 높이는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염선호 기자

광주서 3년 만에 퀴어축제 개최

금남로4가, 광주인권위 등 30여개 단체 참여 예고

동시간대 기독교 단체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집회

광주에서 성소수자들의 인권 신장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퀴어축제가 3년 만에 열린다.

광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조직위)는 29일 광주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제4회 광주퀴어축제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축제 주제는 '무등: 무지갯빛 절대평등'으로, 광주의 대표 상징물 '무등산'과 '등급 또는 차이가 없다'는 뜻을 가진 '무등'에서 착안됐다.

축제는 지난 2018년 첫 개최를 시작으로 이듬해까지 금남로에서 열려왔으나, 2020년부터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대체, 또는 무산돼왔다.

이번 축제에는 국가인권위 광주사무소를 비롯해 지역 시민·인권·노동단체 50여개가 참여한다.

조직위는 이번 축제를 통해 만연해 있는 차별을 없애고 완전한 평등을 이루고자는 취지를 전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금남로 일대를 아우르는 행진도 진행한다.

같은 날 금남로 4가 사거리에서는 광주·전남차별금지법제정반대시민연합이 집회를 예고했다.

기독교·보수 성향 회원들로 이뤄진 단체 시민연합도 금남로 행진을 신고했다.

경찰은 조직위와 시민연합의 집회가 물리적 충돌로 번지는 일이 없도록 행진 범위와 장소 등을 조율 중이다. /오권철 기자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잇달아 승소

희생자 75명 유족 654명에 국가배상… 국가 항소 여부 주목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당시 희생자의 유족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잇달아 승소 판결이 나왔다.

24일 유족 측 소송대리인인 서동용 변호사(전 국회의원)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민사부가 20일 ▲순천 지역 희생자 23명의 유족 191명 ▲고흥 지역 희생자 19명의 유족 225명 ▲여수 지역 희생자 8명의 유족 108명 ▲구례 지역 희생자 4명의 유족 11명이 각각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법원은 광양 지역 희생자 21명의 유족 119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11월 여순사건과 관련해 전부승소 판결이 선고된 원고는 희생자 75명의 유족 654명에 이른다.

유족들의 집단소송에 법원이 전부 승소 판결을 연달아 내놓음으로써 여순사건위원회가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하면 법원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공식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서 변호사는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들에게 있어 국가의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는 것은 법원이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77년 통한의 세월을 지낸 유족들을 위로하는 의미가 있다"며 "소송 결과를 애타게 기다리던 유족들 입장에서 전부승소 판결이 잇달아 선고되는 것은 매우 기분 좋은 결과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부승소 판결이 선고된 사건과 관련해 국가의 항소 여부가 남아있다.

구례 지역 유족들의 일부 승소 판결에 대해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했으나, 이는 그 소송에 국한된 결정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선고된 사건들에 대해서도 법무부의 별도 항소 포기 결정 여부가 주목받는다.

이에 대해 서 변호사는 "구례 지역 유족들 사건에서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 포기의 당위를 설득하는 등 많은 노력 끝에 항소 포기 결정이 내려졌었다"며 "이번에도 법무부가 항소 포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승소 판결이 선고됐던 구례 지역 유족들 사건의 경우 법무부의 항소 포기로 판결이 확정돼 판결금 수령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서 변호사는 77년 통한의 세월을 견뎌온 유족들이 손해배상금을 실제 수령 할 때까지 절차를 밟아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순천/정성인 기자

광주교육청 스마트기기 보급사업 "첫 단추부터 잘못"

기기 먼저 보급하고 나중에 충전설비 설치

일선 학교 전력 과부하 따른 위험요소 존재

광주시교육청의 스마트기기 보급사업이 기반 시설이나 마땅한 컨텐츠도 준비하지 않은 채 기기만 먼저 일선 학교에 제공하는 등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가 24일 배포한 광주시교육청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학급 충전설비지원비 11억6500만원 중 4억848만원(35%)을 감액한 7억5652만원을 계상했다.

교육청은 예산 부족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필수교재에서 선택 가능한 교육자료로 격하되면서 보조배터리 필요성이 떨어졌다고 감액 사유를 밝혔다.

시교육청은 2023년부터 시작한 스마트기기 보급사업에 맞춰 기기 활용에 필수적인 학급 충전설비(충전보관함)를 지원하고 있다.

예결특위는 학생 개개인에게 스마트기기를 제공한 이번 사업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고 비판했다.

스마트기기의 정상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충전설비(분전반)를 우선 설치하고 이어 충전보관함과 스마트기기를 차례대로 보급해야 하는 데, 거꾸로 스마트기기부터 보급하고 나중에 충전 관련 설비를 설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방침만을 쫓다보니 활용할 수 있는 마땅한 교육 컨텐츠도 준비되지 않았다. 현재 전체 스마트기기 보급 대상 학교 321곳 중 59곳만 충전설비를 지원받고 있다.

이 때문에 전력 부하에 따른 과부하 위험이 존재하는 학급이 다수이고, 학급별 기기 수량과 충전슬롯 설치 숫자가 불일치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정기 예결특위 전문위원은 "잘못된 정책 설계와 행정으로 인한 스마트기기 보급사업은 단순한 예산 낭비를 넘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이제부터라도 스마트기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민규 기자

영산강환경청, 27일부터 찾아가는 토지매수 현장민원실 운영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광역상수원(주암·동복·상사·수어·탐진호) 상류 지역 토지매도를 원하는 지역민의 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토지매수사업 현장민원실'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토지매수사업은 광역상수원의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과 수질개선을 위해 토지를 국가가 매수해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로 조성·관리하는 사업이다.

현장민원실은 27일 순천시 승주읍 유동·남강마을을 시작으로 28일 보성군 겸백면 선돌·대겸마을, 12월 1일 강진군 옴천면 정동·화신마을 등 6곳이다.

영산강환경청은 각 마을회관에서 상담·신청·접수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매수토지 관리와 관련된 불편 사항 등도 청취할 예정이다.

김영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맞춤형 현장중심의 서비스를 통해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수질개선 효과를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송현근 기자